

	보도자료	
	담당: 정책위원회	연락처: (02)6788-2606

## 민주당 세법개정안 및 2025년 예산안 국회심사 결과 상속세 등 초부자감세 저지, 권력기관 특활비·과다편성된 예비비 등 4.1조원 감액

- 민주당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국정이 혼란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과 2025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초부자감세를 저지하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문제가 있는 세출사업을 중심으로 4.1조원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심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정부측에서 증액협의를 나서지 않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 및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음

### 1. 초부자감세 저지 성과

-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오너나 거액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완화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처리하였음
- 또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주환원 증대를 핑계로 기업오너에게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오너일가에게 가업상속 혜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게 ISA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부유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함으로써 서민·자영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독소사항들을 삭제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음

- 아울러,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하였음
- 끝으로, 그 외에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개 세법개정안은 우리 당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였음. 그 결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약속대로 폐지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예정이던 가상자산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도 기존에 발표한 바와 같이 2년간 유예하였음

## 2. 2025년 정부예산안 심사 성과

-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에서 합의 처리된 세출 감액사업 이외에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감액하여 총지출을 정부안 677.4조원에서 △4.1조원 감액하였음
- 민주당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감액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3조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4.8조원 中 △ 2.4조원 감액
  - 정부가 올해 8월에 국고채 이자율을 3.4%로 전제하여 편성하였으나, 10월~11월 동안 기준금리가 0.5%p 인하되어 그에 따른 국고채 이자율 인하효과를 고려하여 △0.5조원 감액
  - 감감이 예산 집행으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원, 검찰청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9억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 경찰청 특수활동비 △32억원을 감액하였음. 필요성과 집행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국세청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사업예산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유전개발사업 출자(8광구-6-1광구) △497억원 감액
  - 수원국이 분쟁지역이거나 수원국에서 사업을 취소하는 등 집행되기 어려운 ODA사업 예산 △762억원 감액

- 지적재산권 분쟁, 사업성과 도출 불확실, 사업지연 등의 우려가 있는 글로벌 R&D사업 △392억원 감액
  - 위법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4.1억원, 행안부 경찰국 경비 △1.1억원 감액 등
- 그리고 목적예비비를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소요비용과 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정부로 하여금 미래를 위한 교육과 보육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세출을 △4.1조원 감액하는 한편, 정부가 잘못 편성한 세입 △0.3조원을 감액하면서 국채 신규발행 규모는 △3.7조원 줄여서 재정여력을 확보하였음
-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예산안으로 국채발행 규모를 △3.7조원 줄여 재정여력이 확보된 만큼, 이를 통해 향후 정부가 민생, 경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할 것을 촉구함

2024. 12. 10.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정책조정위원장**